

## 공간정보 보안 규제 합리화로 디지털트윈국토 확산과 AI·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 마련

해당국가	국내	기관(기업)	국토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□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국정과제에 맞춰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합리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

- 민간 구축 공간정보의 보안 기준을 신설해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이 지도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
  - 기존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만 활용하던 한계를 개선하여 민간 구축 지도와 위성영상 등의 자체 보안 심사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
  -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기본법 개정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
- 공개 제한 공간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보안 심사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반복 심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도록 이행 체계를 전면 개편
  -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및 등고선을 포함한 정밀지도 등 핵심 공개 제한 정보의 실무 재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계획
  - 보안 심사 후 1년 이내 동일 정보 재요청 시 핵심 변경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 중복 절차는 전면 생략하도록 실무 규제를 대폭 완화

□ 디지털트윈 국토 확산과 국토 위성 활용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및 AI·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전면 주도할 계획

- 국토를 3차원으로 복제한 디지털트윈 국토 기반으로 다수 기관이 행정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도록 범정부 통합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
  - 재난·안전·기후·환경 등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디지털트윈 국토 개발 기준과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확히 전면 제도화할 계획
  - 기관별로 분산되어 활용이 제약되던 공간정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여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을 마련
- 일관된 보안·활용 기준 적용 범위를 공간정보 생산부터 위성정보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여 산업 구조 개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
  -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 위성의 전담 운영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위성정보 활용을 대폭 촉진할 방침
  - 산·학·연·관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AI·자율주행 등 주요 첨단 산업 활용을 대폭 확대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(2026.06.16),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(AI)·자율주행 키운다